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朴佑炳 위원장

대담 / 李光榮 본지 편집위원

장소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실

일자 : 10월 16일 오전 11시

“고통받아도 과학기술 투자는 절실”

“한마디로 정보통신산업은 ‘되는 사업’입니다” 새 의자에 앉은 박우병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은 말한다. 「과학과 기술」지와의 인터뷰에서 박위원장은 “현재의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미래의 발전과 풍요를 위해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절실하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받지 않고 새로운 상품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산업 정책을 바로 잡아가겠다”고 강조했다.

■ 바쁘신 가운데 「과학과 기술」지를 위해 특별히 시간을 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늦었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정위) 위원장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취임 소감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학과 기술」 독자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서 영광입니다. 선진국의 척도는 그 나라의 과학과 기술 진흥에 좌우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경제성장도 첨단과학기

술과 정보화 속도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보다 앞선 과학기술과 정보마인드의 확산을 통해서 우리도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야 할 중요한 때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자리를 맡게 되어 기쁘기도 하지만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항상 국가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되도록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차위원장께서는 서울대 공대 자원공학과를 졸업(10회)하신 후 삼척

탄좌개발 사장, 대한석탄협회 부회장, 대한광산학회 회장, 한국자원공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시고 88년 제 13대 국회에 진출하신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3대째 의원생활을 하시면서 주로 동자위원회·상공자원위원회 등 과학기술 관련 분야에서 활동해 오신 것으로 압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 국회 개정위 위원장에 취임하신 것은 남다른 감회와 각오가 있으실 것으로 압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과 구

상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3개 상설소위원회 운영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여야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합리적으로 의사를 진행해 온 전통이 있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정해지도록 위원회를 운영할 것입니다. 특히 제가 위원장이 된 뒤에 처음으로 개최된 상임위원회 회의부터는 종전의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탈피하고,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위원회 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의원들이 보다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회의를 보다 민주화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각종 법안 및 청원과 관련된 공청회 등을 자주 개최하여 위원회 활동에 국민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에 과학기술소위원회, 정보통신소위원회, 기상소위원회의 3개 상설소위원회가 구성되어 국회의 회기에 관계없이 소관 행정기관을 상대로 상시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저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상설소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가가 연중 개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국민들이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활동을 보다 가까이에서 접하실 수 있도록 이미 개설하여 운용중인 과학기술정

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회 활동결과를 신속히 알려드리고 또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는 지금 IMF신탁통치라고 하는 어렵고 불명예스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IMF시대를 맞은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국가 경쟁력의 상실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국가 경쟁력은 곧 과학기술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국가 발전은 물론 존립을 위해서도 과학기술과 정보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차위원장께서 과정보위를 운용 하시면서 국회차원에서 이 두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책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요.

먼저 과학기술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의 기초과학수준은 매우 낮아서 이를 바탕으로 한 응용과학분야까지도 그 기반이 매우 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투자는 규모도 크고 또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도

길어서 현재와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투자재원의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미래의 발전과 풍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순수 경제원리라면 따지자면 당분간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나름대로의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과학기술투자에 대해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가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노력도 경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보통신산업은 한마디로 ‘되는 산업’입니다. 또 우리가 어느 정도의 국제적 경쟁력도 갖추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정보통신산업 발전의 주체는 누가 뭐라 해도 정보통신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와 근로자들입니다. 이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받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고 새로운 상품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산업 정책을 올바르게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산업 발전의 혜택이 이용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산업발전에 상응한 이용자 보호에 대해서도 관계법령의 정비를 통해 다져나갈 생각입니다.

■ 요즘 국가 과학기술연구비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습니다. 이같은 비판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 차佑炳위원장(왼쪽)이 李光榮 본지 편집위원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수 있습니다만 국가 과학기술연구 주제의 선정에서 예산배분 그리고 결과에 대한 평가 등 일련의 과정에서 파생되는 일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것인지요.

출연금 합리적 배분 노력

'98년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정부 전체예산대비 3.7%로 약 2조7천억원 가량 되는데, 이와 같이 국가에서 이 부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는 국가 전략상 중요한 분야로써 민간부문이 수행할 수 없거나 관심도가 낮아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연구개발분야를 정부주도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서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국제경쟁력을 양적인 투자규모로는 세계 7위, 질적 요소까지 감안한 종합적인 과학기술 국제경쟁력에서는 세계 28위 수준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범정부차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종합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함께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선정→재원배분→집행→평가·분석 등 연구개발기획의 쉼주기에 걸쳐 재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차원에서는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체적인 규모 및 편성방향에서부터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금이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집행 및 평가(결산)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관심

을 가지고 대안제시를 해나가야 할 것이며, 아울러 예산회계제도상 보완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기타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의 합리적인 구조조정도 현안 가운데 중요한 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먼저 출연기관 구조조정

현재 당 위원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KIST, 생명공학연구소 등 과학기술부 소관 20개 기관과 ETRI 등 정보통신부 소관 출연연구기관이 3개 있습니다. 이는 인문사회계 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정부 전체의 50여개 출연연구기관의 절반을 차지하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포함한 경영혁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정부 전체의 출연연구기관의 성과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관련부처와 연구기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말씀드리면, 출연기관의 경쟁력 제고와 자율적 경영보장을 통한 책임성 확보라는 양 측면이 가장 잘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현재 과정위에 상정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관련 법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요.

주요 법안만 말씀드리면 전기통신

사업법중 개정법률안, 전과법중 개정법률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 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법중 개정법률안, 국가표준기본법안, 멀티미디어폴리스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등이 있습니다. 이 법안들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를 먼저 충분히 심의하기 위해 상임위원들과 함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이같은 충실한 심의를 통해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또 어떠한 것이 우리의 국익에 보다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헤아린 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의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적인 의사진행이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과정위는 여·야의원간에 마찰이 적고 산업발전이라는 대명제에 충실한 상임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원간 이견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조율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지난 15대 전반기에도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야당인 자민련 소속 의원이 위원장직을 맡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후반부에도 야당 한나라당 의원인 제가 위원장직을 맡았습니다. 15대 전반부에도 그러했습니다만 후반부에도 역시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 입장에서 위원회의 활동을 수행할 것이고 위원장으로서 조정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 위원회가 여·야의원간의 마찰이 적었던 이유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학기술분야나 정보통신분야의 발전이 국가발전으로 직결된다는 점에 대해 여·야의 입장이 다를 바 없기 때

문에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해 여·야의
원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함께 노력하
기 때문입니다. 전임자들께서도 그러
하셨지만 저 역시도 민주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여·야를 떠나 국가와 국민
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에서 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의 생각이
이러하고 위원님들의 생각도 저와 크
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
문에 다른 위원회에서와 같은 불필요
한 여·야간의 충돌로 인한 회의의 공
백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국감이 여·야 정국대립으로 미
뤄지다가 마침내 합의를 보았습니다
만 시간에 쫓겨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번 국감
에서 어떤 점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다
를 계획이신지요.

난국 극복은 기술제고 뿐

금번 국정감사는 제15대 국회 후반
기에 행하는 첫번째 감사입니다. 제
15대 국회가 나름대로 새로운 국회
상 정립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같은 모습이 본격적
으로 보여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만 최근의 정치상황이 충실한 국정감
사활동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까 우려
되는 바도 없지 않습니다. 국정감사
에서 다들 사안으로는 과학기술부 소
관으로 국가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
발투자의 종합·조정을 위한 「국가과
학기술위원회」 설치 및 효율적 운영
방안, 정부출연(연) 경영혁신을 위한
구조조정 방향, IMF 극복을 위한
과학기술부문의 투자전략 및 정책방
향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기상청 소관으로 국지기상에

보 및 중·단기에보능력 향상 대책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학적 기상정보
분석 및 국제기상기구와 협력강화 방
안 등이 있고, 정보통신부 소관으로
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구조조정문제,
컴퓨터 2000년 표기문제 대책, 정보
통신부 산하기관의 구조조정문제, 정
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대책,
한국통신 주식매각 및 한국통신보유
SK통신 주식매각문제 등이 주요 국
감사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의회 차원의 대미·대일 등 국가
간 과학기술협력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요.

모든 분야에서도 그렇듯이 한국과
미국간, 한국과 일본간 협력은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국방, 경제 등의
현실을 생각할 때 매우 절실한 문제
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과학
기술협력을 활성화하는 문제는 과학
기술력 제고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길만이 현재의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과제라
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금년 6월 미국 워싱턴 의
회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부 장관
과 양국 의회의 과학기술관련 위원회
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6차 한·미과학기술포럼에서, 우
리측에서 먼저 한·미과학기술의원협
의회(가칭)를 구성하자는 제의를 하
여 이 문제에 대하여 양측이 긍정적
으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제의를 성사시키고 양국 의회차원의
과학기술협력방안을 모색·발전시키고
자 하는 준비단계로써 금년 11월경

에는 미국측의 요청이 있어 우리 국
회에서 미 하원 과학기술위원장 등
과학기술분야에 관심있는 미국 의원
들을 초청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
토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위해서도 금명간에 의회차원
의 협력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 과학기술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
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
시다면 어떤 것인지요.

연구투자 국회차원서 확보

과학기술은 인간의 생명, 안전 등
과 관련하여 실생활에 점차 영향력을
넓혀 가고 있으며, 모든 국민들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
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학기
술은 그 고도의 전문성으로 해서 과
학기술계의 전문가와 우리 일반국민
들 사이의 괴리가 매우 크고, 과학기
술정책 역시 관련 분야의 일부 전문
가들을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형성되
고 집행되어 왔던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과학기술계에 계신 분들은 자기분
야의 전문성을 국민 복지후생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승화시켜 주시기를 당
부드리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을 우선시 할 수 있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수립안을 마련하도록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가의 심각한 경제난으로 과
학기술분야에 연구개발비 지원이 삭
감되고 있어 어려움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분야의 공공부문의
연구개발투자액 만큼은 국회차원에서
확보토록 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